

“尹, 직무복귀 발언에 분노… 역사적 단죄 이뤄져야”

최후 진술에 지역사회 비난 고조
“국민 우롱하는 궤변… 구차한 변명”
지역정가 “현재 신속한 파면” 촉구
“불법 명확…만장일치 판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지역사회·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위헌적이었다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판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제11차 변론(최종)에서 77쪽 분량으로 최후 진술을 했다. 진술문에는 △비상계엄의 취지 △반국가세력 준동 사례 △국정 마비 등 어려움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 △국가안보·국익수호 의지 등이 담겼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간첩(25회)이고 가장 적은 단어는 '송구미안(1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 만의 최후 변론이지만 대국민사과·국민통합 등의 내용은 단 세 줄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2년 반 동안 졸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킨 것이냐”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송구스럽다”며 “직무에 복귀한다면 대통령은 대외관계를 맡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넘기겠다. 개헌·정치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최후진술과 관련해 지역사회는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민 조남문씨는 “늦은 저녁을 먹다가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들었다. 순간 화가 나서 손가락을 내려냈다”며 “구차한 변명뿐이다. 자꾸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

스인데, 해도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다. (비상계엄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영광군민 정모씨는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까지 탄핵소추된 대통령 모두를 봤던 사람으로서 이번이 가장 최악”이라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호남인에게 계엄이란 단어는 절대 가볍지 않다. 무조건 파면이 답이다”고 말했다.

지역정가도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헌법을 가장 잘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인물이 지난 3개월간 법을 이용해 비협조·면피책만 찾고 있다”며 “이번 변론에서도 사실상 반성보다 자신을 옹호하는 집단에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이 강하게 났다.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대국민 호소용이라 주장하며 행정 절차 미흡과 소수 병력 투입 등 명백한 문제점을 회피했다”며 “대통령이 진술

하게 사과하고 헌법재판소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점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며 현재의 만장일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중호 정치평론가협회장(세한대 교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기보다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변론 종료 후 2주 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확고히 유지된다면 ‘재판관 만장일치’도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사례에서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포함됐지만 8: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최종 판결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현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에 대한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광주시의회, ‘조례 실효성 제고 입법평가위’ 가동

위원장에 이귀순 의원 선출

광주시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시의회는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행 2년이 지난 조례들을 대상으로 입법 목적 실현, 계획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

위법령 반영 여부, 인권·성 평등 침해나 차별 문제 등을 평가하는 제도 하에 진행된다. 회의에는 시의원, 대학교수,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이귀순 의원이 선출됐다.

오는 3월부터 입법평가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해 424건 중 50여 건의 주요 조례를 평가 대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민주, 담양군수 재선거 국민참여경선 실시

내일부터 3월2일까지 투표 진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노 전 담양군수의 직위상실형으로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러진다.

26일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39조 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등에

의거,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선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국민 참여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각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로, 투표 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 경선에는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

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

한편 곡성·영광 재보궐선거에서 불었던 ‘조국혁신당 바람’으로 인해 출마 여부가 주목됐던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확정지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기적 전 담양군의원은 “무소속으로는 한계를 느꼈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오지현 기자

제22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5년 4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대회장소 승촌보

대회코스 승촌보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40,000원 (기념품 지급)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5년 4월 3일(목) (선착순)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젤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